



노동자 투쟁
지하철 2면 | 철도 3면
학교 비정규직 10면
화물연대 10면

반윤석열
운동
11면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12~13면

우크라이나
전쟁
8~9면

동덕여대 학생 투쟁
정당하다
16면

중동 전황

시리아 내전 재점화 4, 5면
휴전 이후 레바논 5면
팔레스타인 6면
국회, 가자 영구 휴전 촉구 결의 7면

계엄 통치 획책한 윤석열은 퇴진하라!

민주노총 총파업이 최대한 크게 조직돼야 한다

12월 3일 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불과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해야 했다.(밤새 벌어진 계엄 철폐 시위 소식은 본지 웹사이트에 실린 온라인 기사를 보시오.)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은 즉시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파업과 집회 및 시위 등을 금지한다고 포고했다.

윤석열은 계엄 선포 직후 중무장한 군인들을 국회 경내에 투입시켜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집결을 막았다.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창문을 부수고 진입했다. 국회가 계엄해제권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봉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계엄이 선포되자 즉시 사람들이 국회 앞으로 몰려왔다. 새벽임에도 4000여 명이 순식간에 국회 정문 앞에 모여 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군인들에게 항의하며, 장갑차를 가로막았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오도가도 못하는 장갑차의 모습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커다란 대중적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줬다.

민주노총도 4일 오전부터 "윤석열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반발이 커지자 여권과 보수 언론에서도 계엄 반대 목소리가 나오

는 등 윤석열은 자기 편에서도 계엄 지지도 충분히 모으지 못했다.

결국 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가 가결됐고, 윤석열은 새벽에 계엄을 해제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반민주적 폭거다. 윤석열은 "종북 반국가 세력"과 "입법 독재"를 척결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북한 위협을 빌미로 정치적 반대파를 무력으로 억압하려 한 것이다.

계엄 선포 전에 이미 윤석열의 정치 위기는 심각했다. 지지율은 추락했고, 대중의 반윤석열 정서도 확산되고 있었다. 반윤석열 집

회도 5주째 10만 명 규모로 서울 도심에서 열리고 있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윤석열은 군대를 동원해 민주주의를 공격하려 한 것이다. 윤석열은 계엄으로 정치적 반대파들을 억압하고, 민주적 권리를 공격해 대중을 위축시키려 했다.

윤석열은 반동적 시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반격할 수 있다. 그가 권좌에 있는 한 안심해선 안 된다. 즉시 끌어내려야 한다.

따라서 투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윤석열 퇴진을 위해 모두 떨쳐 일어나 행동할 때다. 모두 거리 시위에 나서자. 민주노총은 예정대로 총파업을 실행해야 한다.

12월 6일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 예고

임금 인상! 인력 충원! 외주화 철회!

수년간
억제돼 온 임금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인력 충원, 외주화 철회, 2호선 1인 승무 저지를 요구하며 12월 6일 파업을 예고했다. 11월 20일부터는 준법 투쟁을 벌이고 있다.

준법 투쟁은 2인 1조 작업, 승강장 안전문 매뉴얼 준수 등 안전 규정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다. 인력 부족 탓에 이런 규정을 다 지키면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효과가 난다. 철도노조도 준법 투쟁을 한 11월 22일에는 1·3호선 열차 30대가 20분 이상 지연됐다.

정부와 서울시는 “시민 불편” 운운하며 노동자들을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나 인력을 줄이고, 재정 지원을 외면하고, 요금을 인상해 안전과 서비스를 악화시킨 것은 다름 아닌 정부와 서울시다. 그 과정에서 지하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열악해졌다.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은 인력 부족과 산업재해에 시달려 왔다. 올해에만 노



지하철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은 지하철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동자 2명이 작업 중 감전사로 사망했다.

무엇보다 수년간 임금이 억제된 것에 불만이 상당하다.

2021년 임금이 동결됐고 그 뒤 지난해까지 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인상률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가 제시한 인상

률이 물가 상승률의 절반도 안 됐는데도 말이다(실질임금 삭감). 대졸 신입임금이 200만 원대 초반에 불과한데 임금 인상률도 낮아 신규 직원들의 퇴사도 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인

건비가 부족하다며 이번에도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2.5퍼센트, 262억 원 소요)만큼 올릴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최소한 공공기관 인상률은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규모 인력 감축,
1인 근무 확대 시도

사용자 측은 지하철 재정 적자를 이유로 2026년까지 2200여 명(정원의 13.5퍼센트)의 대규모 인력 감축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383명에 이어 올해는 341명을 줄일 방침이다. 사용자 측은 이를 위해 올해 정년퇴직 예정 인원을 보충할 신규 채용을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다.

착한 적자

2호선 1인 승무제 도입, 환승역 역사 인력 감축, 차량·기술 업무의 외주화·인력 감축 등이 구조조정 방안으로 제시됐다. 지금도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은 인력 부족 탓에 야간에 역사에서 홀로 취객을 응대하고, 차량 노동자들은 업무 과중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겪고 있다.

대규모 인력 감축은 노동강도를 높일 뿐 아니라 안전도 위협한다. 대우지하

철 화재 참사,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 사망 사고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될 수 있다.

예컨대 사용자 측이 내년부터 1인 승무(열차 맨 뒤에 차장 탑승을 없앴)를 시행하겠다는 2호선은 서울지하철 노선 중 밀집도와 혼잡률이 가장 높고, 열차 길이가 200미터에 달한다. 1인 승무가 되면 기관사 혼자서 열차 운행 및 승·하차 점검, 스크린도어 확인 등 여러 업무를 떠맡아야 한다.

그러나 필수 공공서비스인 대중교통이 적자를 내는 게 무슨 문제란 말인가? 노약자 등 무임승승, 환승 할인, 심야 운행 등은 공공서비스와 교통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착한 적자’다.

노동자·승객의 생명과 안전보다 오로지 비용 절감에만 혈안인 서울시와 공사야말로 진정 “시민의 발”을 위협하고 있다.

오세훈의 위기는 투쟁의 기회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인력 충원 요구는 지하철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이롭고 정당한 요구다. 또 생계비 고통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파업엔 서울교통공사 내 최대 노조(전체 직원의 60퍼센트)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뿐 아니라 3노조인 올바른노조(일명 MZ노조)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12월 2~4일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올바른노조는 지난해까지 서울교통공사노조의 투쟁에 동참을 꺼리거나 심지어 비난하기도 했다. 그런데 올해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 그만큼 기층 노동자들의 분노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그간 빼앗겼던 임금과 인력을 이번에는 만회해야 한다는 간절함이 크고, 반(反)윤석열 운동의 성장 속에 자신감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듯하다.

오세훈의 정치 위기를 활용해 볼 수 있다는 생각도 할 법하다. 오세훈은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 서울시장 여론조사비용 대납(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철도노조의 12월 5일 파업 돌입 계획도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줬을 것이다. 두 투쟁이 결합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신정환



철도노조 12월 5일 파업 예고

임금 인상, 인력 충원, 외주화 반대 투쟁 정당하다



김민준

정선영

철도 노동자들이 12월 5일(목)부터 파업 돌입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파업의 핵심 요구는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외주화 반대이다.

11월 28일 서울 수색역에서 열린 야간총회에서 철도노조 서울기관차승무지부의 한 노동자는 이렇게 발언했다.

“제가 올해 철도 10년차인데요. 옛제가 월급날이었는데, 월급 받아서 대출 이자랑 어린이집, 보험료 내고 나니까 60만 원 남았어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물가 인상은 2.4퍼센트예요. 정부 기준 2.5퍼센트 임금 인상해도 0.1퍼센트 오르는 건데, 그조차도 안 주겠다니 실질적으로는 임금 삭감이지 않습니까. 열반죠.”

정부는 매해 공공기관 인건비 지출을 발표해 임금 인상률을 제한해 왔다. 철도 노동자들의 임금도 이 수준으로 정해져 왔다.

그런데 올해 철도공사는 인건비가 부족하다며 정부가 제시한 2.5퍼센트 임금 인상은커녕 기본급을 동결하겠다고 한다. 대폭 인상해도 모자랄 판에 말이다.

지난 몇 년간 철도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크게 삭감됐다. 2021~2023년 소비자물가가 12퍼센트 가까이 오르는 동안 철도 노동자들의 임금은 4퍼센트 밖에 오르지 않았다. 실질임금이 무려 8퍼센트나 삭감된 것이다.

또, 기본급의 100퍼센트를 주기로 한 성과급도 삭감됐다. 성과급 삭감은 노사 합의 위반이라 명백한 불법이지만 철도공사 측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앞으로도 성과급을 삭감하겠다고 한다.

이에 맞서 노동자들은 기본급을 2.5퍼센트 인상하고, 합의대로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철도공사가 약속한 만큼이라도 달라라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한목소리로 “너무나 소박한 요구”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인력 부족과 외주화도 심각한 문제다.

노동자들은 인력 부족 탓에 연차도 제대로 못 쓰고 있는데, 공사는 인력 충원은커녕 정부 지침에 따라 정원을 1566명 감원하려고 한다.

또, 올해 서해선 등 9개 노선, 51개 역이 새로 개통되지만 공사는 신규 인력을 뽑지 않고 업무를 외주화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매해 노동자 2명이 안전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인원 감축과 업무 외주화는 노동자들과 승객들의 안전을 더욱 위협하는 일이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돈이 없다면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강도를 옥죄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부자와 기업주들을 위해 수십조 원 감세 혜택을 준 것을 보면 결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최근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활비만도 수백억원인데, 이 돈만 있어도 철도 노동자들

의 임금 인상 요구를 충분히 들어 줄 수 있다.

한편, 철도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주요 요구로 걸고 싸우는 것이 대중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일각에 존재한다. 진보·좌파 단체 중에는 이번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면서도 임금 쟁점을 부각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만큼도 오르지 않는 임금은 오늘날 대다수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므로 임금 인상 투쟁은 노동자 등 서민층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잠재력이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보잉 공장 노동자들이 7주간 단호한 파업을 벌여 4년간 기본급 38퍼센트 인상을 쟁취하는 성과를 거뒀다. 미국 항만 노동자들은 물류를 마비시키는 파업을 벌여 6년간 기본급 62퍼센트 인상을 쟁취했다. 이런 사례는 경제 위기 시기에도 노동자들의 단호한 투쟁과 연대를 통해 임금 인상을 성취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잠재력을 보여 준 2016년 철도 파업

이번 철도노조의 투쟁은 윤석열 정부가 심각한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 달이 넘게 매주 주말 적어도 10만 명이 참가하는 반(反)윤석열 집회가 열리고 있다. 특히, 교수, 종교인, 학생 등의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철도노조의 파업 예고는 사람들에게 2016년을 떠올리게 한다. 2016년 성과연봉제에 맞서 74일간 벌인 철도 파업은 박근혜 퇴진 운동이 성장하는 방아쇠 구실을 했다.

당시 투쟁에 참가했던 많은 철도 노동자들이 박근혜 퇴진 운동에 자신들이 기여한 것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당시 투쟁으로 박근혜를 탄핵시켰지만, 노동자들 자신은 얻은 것 없이 희생만 했다는 목소리도 있는 듯하다. 파업 기간에 무임금이 적용돼 노동자들은 수백만 원씩 손해를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파업에서 노동자들이 얻은 것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 파업의 핵심 요구였던 성과연봉제를 결국 막아 냈다.

물론 박근혜 퇴진 운동이 분출한 국면에서 노동자들은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도 있었다.(관련 기사: 본지 201호 ‘계급관점에서 본 박근혜 퇴진 운동’)

2016년 12월 초순경 박근혜 퇴진 운동은 230만 명이 참가하며 최대 규모

로 성장했다.

그런 상황에서 12월 7일 당시 철도노조 집행부가 (심상정 당시 의원과 민주당 등의 압박에 응해) 일방적으로 파업 종료를 선언해 노동자들은 당장 손에 쥔 것 없이 복귀해야 했다. 이미 11월부터 지도부가 파업을 종료하려 할 때 노동자들은 두 번이나 저지하고 74일간 파업을 지속하며 투지를 보여 줬는데도 말이다. 박근혜 퇴진 운동의 성장 속에서 자신감이 상승한 노동자들은 더 싸우면 양보를 얻어 낼 수 있다고(옳게) 봤던 것이다.

박근혜 퇴진 운동의 성장 속에서 철도 파업이 다른 노동자 투쟁을 자극하기를 바라지 않았던 민주당과 국민의

당, 당시 정의당 등의 요구로 노조 지도부가 결국 파업을 종료시켰다.

2016년에 철도 파업이 더욱 전진했다면 노동자들이 더 많은 즉각적 성과를 얻고 박근혜 퇴진 운동도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다.

2016년 철도 파업이 보여 준 잠재력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현재 예고된 철도 파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2월 5일 철도노조의 파업이 다음날로 예고된 서울지하철과 학교비정규직 파업을 자극하고, 윤석열 퇴진 운동을 고무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위기는 철도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기에 좋은 기회다.

시리아 내전 재점화

제국주의간 경쟁으로 얼룩진 시리아

아서 타우넨드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10년 만에 최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난주에 시리아 내전이 다시 불붙은 것이다. 튀르키예가 후원하는 이슬람주의 무장 단체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이 이끄는 무장 세력이 시리아 북부에서 공세를 펴기 시작했다.

HTS는 2017년에 여러 단체들이 통합되며 창설됐다. HTS 지도자 아부 무함마드 알줄라니는 2016년에 알카에다와 결별한 인물이다.

지난주 HTS는 시리아 제2의 도시 알레포를 장악했고 HTS가 이끄는 무장 세력은 현재 시리아 깊숙이 진군하고 있다. 러시아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아사드는 통제력을 회복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리아 사회주의자 가야스 나이세는 최근 사태를 파악하려면 세 가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소셜리스트 워커>에 말했다.

첫째, 2011년 시리아 혁명(아래를 보시오). 둘째, 이 혁명을 분쇄하기 위해 아사드가 일으킨 유혈낭자한 내전. 셋째, 시리아를 갈가리 찢어 놓은 제국주의 전쟁과 갈등.

나이세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튀르키예 정권은 시리아 정권과의 관계 정상화를 도모했습니다.

“그 과정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시리아 정권은 협상 진전을 거부했는데, 튀르키예가 자국 군대를 시리아에서 철수시킬 것을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사드 정권은 시리아를 단독으로 지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점을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세는 경제적·제국주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튀르키예가 시리아에 계속 있고 싶어 하는 이유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튀르키예가 시리아에 개입하는 주된 목적은 쿠르드 독립 국가 건설 투쟁을 분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튀르키예 대통령 레지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은 튀르키예 일부와 시리아 북동부에서 세를 유지하고 있는 쿠르드를 상대로 혹독한 탄압 전쟁을 벌이고 있다.

시리아 북부의 쿠르드 거주지 ‘로자바’는 튀르키예-시리아 국경 지대에 있



시리아 내 세력별 영토 분할 현황(2024년 6월 기준)

고, 튀르키예 내 쿠르드 단체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지난 일요일 HTS는 알레포 북부의 쿠르드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나이세는 HTS(와 튀르키예)가 지금을 아사드 정권에 도전할 적기라고 여기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개괄했다.

“HTS는 시리아 내 가장 중요한 이슬람주의 무장 단체이고 튀르키예의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헤즈볼라와 이란은 아사드 정권에 막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현재 둘 모두 서방 제국주의와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우고 있죠.”

아사드 정권과 이란, 헤즈볼라 사이의 연계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들 중 하나만 공격해도 사실상 그들 모두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낸다.

“러시아도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지만 현재 그 지원은 예전만 못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서방에 맞서 싸우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미국의 정권 교체기라는 점도 한 요인입니다. 튀르키예 국가는 도널드 트럼프가 에르도안을 좋아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견지에서 보면 튀르키예로서는 지금이 아사드를 공격할 적기인 거죠.”

그러나 그런 역학에는 모순이 있다. 미국은 아사드 정권의 몰락이 초래할 혼란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나이세는 이렇게 지적했다. “HTS가

세울 정권은 매우 불안정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제국주의적 이해관계에 따라, 약간이라도 안정을 유지할 아사드 정권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서 나이세는 “HTS의 주된 목표가 시리아 내 더 많은 지역을 장악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는 아사드를 압박해 튀르키예와의 협상에 나서도록 만든다는 에르도안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 나이세는 이렇게 말했다. “튀르키예, 러시아, 아사드 정권 사이에 새 합의가 맺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합의가 맺어진다면 시리아에 대한 튀르키예의 영

향력이 커질 것입니다.

“HTS가 공세를 밀어붙이면 러시아는 HTS를 억지하려 개입할 것이고, 그 후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튀르키예와 협상을 하겠죠.”

지난주 러시아는 HTS의 초반 공세에 느장 대응했지만, 현재는 알레포에 폭격을 시작한 상태다.

나이세는 이렇게 내다봤다. “이번 사태의 승자는 튀르키예가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시리아 제 세력들의 국외 후원자들이 다른 곳에 발목이 묶여 있기 때문이죠. 에르도안은 시리아의 항배에 개입할 최적의 전략적 시점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 국가는 쿠르드를 억압할 역량도 강화하겠죠.”

나이세는 HTS가 아사드 정권에 도전하고 있지만 사실상 튀르키예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2024년에 시리아인들은 HTS에 맞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HTS는 시민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적대적이고 여성을 차별하며 사회적으로 보수적인 세력입니다. 종교를 내세우는 많은 단체들이 그렇듯 HTS도 모순투성이입니다.”

시리아를 두고 제국주의 간 갈등이 끓어오르는 지금, 나이세는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이 갈등에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득이 되는 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혈이 낭자할 따름입니다.

“저희는 이 전쟁에 반대하고, 시리아에서 모든 세력들이 철군하고 시리아 사람들에게 자결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합니다.”

아사드는 혁명을 분쇄하려고 어떻게 종파 간 전쟁을 이용했는가

시리아 혁명은 2011년 ‘아랍의 봄’ 항쟁의 일환으로 발발했다. 혁명의 목표는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타도였다. 바샤르 알아사드는 그 아버지 하페즈가 사망한 2000년 이래로 시리아를 통치해 왔다.

오랜 빈곤과 독재에 대한 분노가 대중 시위로 분출했고, 2011년 3월에는 국가의 탄압에 맞서 거대한 세력들이 전투를 벌였다. 노동자와 빈민들이 그 싸움에서 핵심적 구실을 했다.

이에 대응해 아사드 정권은 혁명을

피로 물들이려고 잔혹한 종파 간 내전을 일으켰다.

대개 평생 총 한 발 쏜 적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신생 무장 단체들에 합류해 정권에 맞서 싸웠다.

그런 무장 단체들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대한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탈영한 군인들이 만든 것이었다.

그런 무장 단체들은 상호 조율을 위해 자유시리아군(FSA)을 창설했다. 그

▶ 5면으로 이어짐

레바논 마르크스주의자가 말한다

“휴전에도 투지와 단결의 정서가 있습니다”

레바논인 마르크스주의자 시문 아사프(사진)가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에 대한 레바논 현지의 반응을 전한다.

“휴전이 발효된 11월 27일 수요일에 100만 명이 레바논 남부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승리와 투지, 단결의 정서가 있습니다.

“레바논 남부를 향하는 행렬은 장관이었습니다. 음식점들이 음식을 공짜로 나눠 줬고 대중적인 음식 나눔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레바논 사회주의자 시문 아사프가 전한 말이다.

휴전 발효 몇 시간 전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더 거세게 폭격했고, 소개령을 내렸던 레바논 남부 마을로 돌아오지 말라고 레바논인들에게 경고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폭격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레바논 남부로 몰려 갔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는 분노가 일었습니다. 레바논 사람들은 파괴가 자행되는 와중에도 집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이스라엘인들은 아직 돌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쪽 국경 지대에서 헤즈볼라 전사들을 궁지에 몰려 했지만, 레바논 대중이 헤즈볼라 전사들을 도우러 왔어요. 놀라운 수준의 연대입니다. 이것은 아래로부터의 자생적인 지지입니다. 대중 운동과 무장 저항 조직들의 관계를 잘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대중의 지지가 무장 저항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휴전 합의는 2006년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을 끝낸 유엔 결의안 1701호를 사실상 복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동의해 준바에 따라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합의를 어기면 레바논에 개입할 권리를 갖는다.



“휴전 합의는 모호하고, 이미 이스라엘은 이를 깨려 하고 있습니다. 합의의 세부 사항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원한다면 언제든지 합의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실제 벌어지는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시아파 레바논인들에게 피란처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을 처벌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종단·종파에 따라 분열시키려는 이스라엘의 시도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외려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종단·종파를 뛰어넘는 단결의 정서를 낳은 것입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학살 정권에 맞서 싸웠고, 9월에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가 살해되는 등 심각한 손실을 입었다.

이전에 헤즈볼라는 팔레스타인-이스라엘 간 휴전이 체결되지 않으면 자신도 휴전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었다.

아사프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야만적 공격 때문에 애초 입장에서 후퇴해 추가 공격을 피하는 쪽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1톤 짜리 폭탄으로 거듭 공격하고, 주요 유

휴전 발효 직후 레바논 남부 제프타에서 헤즈볼라 깃발을 흔드는 사람들

적지와 수도 베이루트의 핵심부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아사프는 이렇게 강조했다. “정서를 보면, 레바논 전역에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투지와 굳건함이 느껴지는 한편, 이스라엘의 공격에 레바논이 얼마나 맞설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 고려 또한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시리아 내전 때 시리아 정권을 지원하면서 얻은 오명을 씻었습니다. 사람들은 헤즈볼라를 지지하고 있어요. 나스랄라는 팔레스타인을 위해 죽었고 이제 성자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대가 솟구치고 휴전이 체결됐지만 사람들은 “이것이 끝이 아님을 이해하고 있다”고 아사프는 전했다. “헤즈볼라가 자국 국경 지대에

있는 것을 이스라엘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자신의 존재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고, 레바논이 완전히 파괴돼 공동묘지처럼 조용해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은 다시 레바논을 공격하러 돌아올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입니다. 이스라엘의 압도적 무력에 맞서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자지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거대한 대중 운동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터뷰·정리 아서 타우넨드

출처 Arthur Townend, “Defiance and unity after ceasefire”—interview with Lebanese socialist (2024. 12. 01) / 번역 김준호

▶ 4면에서 이어짐

럼에도 여전히 저항은 중앙 지도부 없이 파편화돼 있었다.

2014년이 되면 아사드는 이란과 러시아의 군사 지원을 받고 있었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아사드 정권을 지키려고 혁명 반군을 폭격했다. 이란도 자기 영향력을 이용해 레바논 저항 단체 헤즈볼라를 설득해,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도록 했다.

제국주의 강대국들은 이를 시리아

“개입”의 빌미로 삼았다. 미국은 아사드 정권을 폭격하겠다고 위협했고, 그 후에는 시리아 북부에서 아사드에 맞서 싸우는 쿠르드 세력도 지원했다. 그러나 서방은 튀르키예가 시리아 북부를 침공하자 재빨리 쿠르드를 버렸다.

아사드는 혁명 분쇄에 성공했지만 얼마간 대가를 치러야 했다. 현재 시리아는 이전 어느 때보다 분열돼 있고, 지역 강국들과 주요 제국주의 강대국들 모두가 시리아를 통제하려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다.

현재 아사드 정권은 시리아 영토의 약 65퍼센트를 통제하는데, 그조차 러시아의 공군력에 크게 기대고 있다.

HTS 같은 이슬람주의 무장 단체들은 시리아 북부에서 전에 없이 넓은 영역을 장악하고 있다. 거기서 이슬람주의 무장 단체들은 독립 국가 수립을 놓고 쿠르드 전사들과 쟁투를 벌이고 있다.

혁명 이래로 아사드 정권은 “군사적으로 취약하고, 다른 지역 강국들의 군

사적·경제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나이세는 지적했다.

“시리아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기도 물도 의료도 없어요. 사람들의 기본적 필요가 충족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저항은커녕 살아남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아사드는 권좌를 부지하기 위해 시리아인들의 곤궁을 이용하고 있다.

출처 Arthur Townend, ‘Imperial rivals circle Syria as civil war returns to Aleppo’ (2024. 12. 2) / 번역 김준호

트럼프의 “지옥” 협박에도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은 계속된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와의 휴전에 합의한 뒤 가자지구로 다시 집중 공격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폭격을 강화하고 있고, 이스라엘군 탱크들이 가자지구 남쪽과 북쪽에서 진격하고 있다.

이미 지난 60일 동안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를 잔인하게 공격해 팔레스타인인 1만여 명이 부상당했다. 또, 사망하거나 실종된 3700명 중 2400명이 잔해 아래에 묻혀 있다.

네타냐후는 레바논 휴전을 통해 북부 전선과 남부 전선을 분리하고 하마스를 고립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스라엘-헤즈볼라의 휴전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의 저항을 꺾지 못했음을 뜻한다.) 가자지구에서의 인종 학살을 더 격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미국도 레바논 휴전 체결 전주에 있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가자 휴전 결의안을 거부해,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 재강화 계획을 뒷받침했다. 네타냐후의 주장에 따르면, 트럼프가 “자신이 있는 한 [이스라엘로의 무기 선적] 지연은 일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자신도 2025년 1월 20일 자신의 대통령 취임식 때까지 가자지구에 억류돼 있는 이스라엘 인질들을 석방하지 않으면 중동과 하마스에게 “지옥이 닥칠 것”이라고 협박했다.

“다들 중동에서 전 세계인의 의지에

반해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으로 억류되고 있는 인질들에 대해 말한다. 그러나 말뿐이고 행동은 없다!”

레바논 휴전을 반대한 이스라엘 극우 세력도 가자 공격 재강화를 지지하고 나섰다.

이스라엘 내각에서 유일하게 레바논 휴전안을 반대했던 국가안보 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도 네타냐후의 가자지구 공격 재강화를 지지했다. “가자지구 정착 같은 아이디어를 환영한다. 가자지구 정착은 분명 좋은 아이디어다.”

이타마르는 이참에 아예 팔레스타인인들을 강제 이주시키려고 한다. “나는 이주를 권장하고자 한다. 내 생각에, 우리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자발적으로 그들 나라로 이주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가자지구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피난처를 떠나 거리에서 혹독한 겨울을 견뎌야 할지, 아니면 지금 있는 곳에서 폭격당할 위험을 감수해야 할지 괴로워하고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이스라엘군의 폭탄과 총알로부터 안전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미국의 저명한 탐사 저널리스트 시모어 허시는 “현재 가자지구 현지의 삶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는” 소식통으로부터 받은 소식을 공개했다. 제목은 “강제로 소개하고 난민촌을 파괴하라”다.

“가자지구 북부의 상황은 홀로코스



폐허 속에서도 저항의 벽화 그린 팔레스타인인들

트 상황이다. 홀로코스트는 서구인의 상상력과 마음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동 처벌, 인간성 말살, 기술 수단이라는 면에서 그것은 홀로코스트다. ... 미사일을 민간인 밀집 지역, 주로 텐트촌에 발사하고 그 뒤 드론이 날라와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내 살상한다. 제2차세계대전 때는 드론이 없었지만 지금은 있다. 그러나 그 논리는 홀로코스트와 거의 비슷하다.”

이것은 나치의 유대인 홀로코스트를 이용해 팔레스타인인들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유대인 혐오론자”라고 비방하는 시온주의자들에 대한 반박이다.

하마스의 반격 역량

그러나 잿더미 속에서도 가자의 저항은 계속되고 있다.

12월 1일, 하마스의 군사 조직 알카삼 여단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메르카바 탱크를 습격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미들 이스트 아이〉는 이를 전하며 “하마스가 가자 전역에서 이스라엘군을 상대로 공격에 나설 역량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논평했다.

허시의 소식통은 이렇게 말했다. “희망을 찾자면 가자 사람들이 좀비가 되지 않았고 서로를 잡아먹고 찢어 죽이지 않는다는 점일 것이다.

“예술 작품을 계속 창작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난민촌에서 먹을 거리와 농작물을 계속 재배한다.

“지금 이스라엘이 타격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난민과 난민촌의 힘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적이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을 난민으로 만들어 버리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강인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 난민 귀환권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역에 세워지고 있거나 이미 존재하는 텐트와 난민촌을 끊임없이 폭격하고 포격하며 파괴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난민촌을 공격하는 이유는 지난 80년간 대응하면서 이곳이 기억과 역사, 조직과 정체성의 장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파괴하려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이스라엘 영자 일간지 〈하아레츠〉(11월 29일 자)는 가자지구 지상전에 참전한 의명의 예비역 전투병이 한 말을 실었다.

“가자지구 파괴는 엄청나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야 한다: 앞으로 100년 동안 이 파괴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파괴를 지우고 하리게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가자지구의 파괴는 앞으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삶을 규정할 것이다. 무자비한 폭력의 증거다.”

김인식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or.kr/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paper@ws.or.kr



ws.or.kr/online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검색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국회의 가자지구 영구 휴전 촉구 결의, 환영할 것이 못 된다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이 재석 국회의원 202명 중 200명의 지지로 통과됐다.

제목만 보면 진일보한 결의안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참여연대도 이를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로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그러나 이번 국회 결의안은 환영할 만한 것이 못 된다.

결의안은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을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는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식민 지배 역사 전체가 아니라 1967년 전쟁 이후의 점령만 ‘불법’으로 문제 삼는다.

이번 결의안은 팔레스타인인들의 대의와 저항을 지지한다는 말 대신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 모두에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한다. 학전 위험에 우려만 표할 뿐, 그 위험의 책임이 이스라엘과 미국에 있다는 점도 말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결의는 이스라엘을 견제하는 이데올로기적 효과가 (대외적으로든 국내적으로든) 거의 없다. 오죽하면, 이 결의안을 추진한 민주당의 광주시장 강기정은 그 결의안이 통과된 날, 주한 이스라엘대사를 극진히 대접하고 있었을까?

이번 국회 결의는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등이 발의한 휴전 촉구 결의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김석기 의원(국민의힘)의 수정을 거쳐 통과된 것이다.

사실 이재정 의원 등이 발의한 결의안도 (이번 결의안에서는 빠진 이스라엘 규탄과 제재를 포함하기는 했지만) 양비론 때문에 이스라엘을 견제하는 이데올로기적 효과가 약했다. 그런데 국회에서 통과된 결의는 그보다도 더 후퇴했다.

후퇴

이재정 의원 등의 결의안 초안에서는 이스라엘인 포로 석방과 함께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석방 촉구가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통과된 결의안에서는 이스라엘인 포로 석방만 촉구할 뿐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 촉구가 빠졌다.

이재정 의원 등의 초안에는 한국 정부가 지난 9월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 종식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 결의에 따



결의안 통과 당일 민주당의 광주시장 강기정은 주한 이스라엘대사를 만났다

른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는 문구가 있었다. 하지만 통과된 결의안에서는 주어가 불분명한 채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참여연대는 이런 후퇴에 “유감”을 표했지만 국회가 초당적 지지로 휴전을 촉구한 것에 더 큰 의의를 둔다.

그러나 국회의 초당적 촉구가 과연 얼마나 큰 의의가 있을까?

한국 정부에 부담을 주는 내용은 모두 빠졌다. 이재정 의원 안에는 앞서 언급한 9월 유엔 총회 결의 채택 당시 한국 정부가 기권 투표한 것을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국회 결의에는 그런 지적이 없다.

또, 국회 결의에는 결의안 통과 일 전 네타냐후 등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내용도 없다. 한국 또한 ICC 당사국이기에 그들을 체포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국회 결의에는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빠져 있다.

이는 미국이 ICC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프랑스도 ICC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서방 쪽 분위기를 의식한 회피일 것이다.

사실, 민간인 피해를 우려하며 국제법 준수를 촉구하는 것은 미국 등 서방 지배자들의 입장을 본질적으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또한 유엔 안보리의 휴전 촉구 결의안에는 찬성 투표한 바 있다. 그러니 이재정 의원의 결의안에 대해 외교부조차도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 등을 감안할 때 결의안

추진 취지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일 테다.

국회와 국제 기구들을 움직이는 것에 이스라엘을 막을 궁극적 힘이 있지 않다. 따라서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그것의 보조 수단으로 봐서는 안 된다.

미국 등 서방 지배자들이 휴전 문제로 이스라엘과 갈등을 빚고 국제 기구들이 이스라엘에 불리한 결정들을 내리는 이유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과 거대한 국제적 연대 운동이 여론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국제 기구들의 조치들은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제재하는 내용일

때조차 언제나 뒤늦고 언제나 불충분하다. 강대국 지배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거슬러서 그런 압력을 실제로 수용하려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진정한 변화를 성취하려면 지배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그르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할 만큼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미국 제국주의에 반기를 들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런 민주당 정치인들을 설득해서 국회를 움직이고, 나아가 미국 등 서방이 주도하는 ‘국제 사회’를 움직여서 이스라엘과 미국 정부를 멈추겠다는 시도는 무망하다.

이원웅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 설정



- ▶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 영상
- ▶ 주요 시사 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 630여 개 콘텐츠 체계적 분류
- ▶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저항, 역사, 전망
-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지금 구독하세요!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문의: 02-2271-2395

ws.or.kr/what-we-stand-for

기본입장

ws.or.kr/join





미국,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의 피로 전선을 지키려고 하다

김영익

11월 27일 AP통신은 바이든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징집 연령을 기존 25세에서 18세로 낮추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동원을 채근하는 것은 전선 상황과 관련 있다. 모든 주요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크게 밀리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더 많은 우크라이나 청년들을 전선에 밀어 넣어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독일 정부도 우크라이나에 징집 연령 하향을 요구한다고 보도했다.

이미 우크라이나에서는 동원 가능한 연령인 18세~49세 남성의 5퍼센트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다. 11월 20일 껄럽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52퍼센트가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년 전 조사 때의 27퍼센트보다 훨씬 늘어난 수치다.

그럼에도 서방 정부들은 우크라이나 청년들이 전선에서 아무리 많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냉혹한 태도다.

바이든뿐 아니라 많은 서방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 대리전이 지속되기를 원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 유리하게 끝날 경우 미칠 파장을 우려해서다. 그래서 승리가 요원해도 러시아의 진을 최대한 빼

놓으려는 것이다.

11월 24일 프랑스 외무장관 장-노엘 바로는 이렇게 말했다. “러시아군이 1킬로미터 전진할 때마다 유럽에 대한 위협도 1킬로미터 가까워진다.”

29일 영국 해외정보국(MI6) 국장 리처드 무어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하면 중국·북한·이란이 “대답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드는 비용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 치를 대가가 훨씬 클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전쟁은 확대돼 왔다.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사용 제한을 풀어 주자마자 우크라이나가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것이다. 러시아는 맞대응으로 11월 21일 신형 탄도미사일 ‘오레스니크’로 우크라이나 드니프로를 공격했다.

28일 푸틴은 미사일 공격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방부와 러시아군 총참모부가 우크라이나 영토 내 표적을 선정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군사 시설, 방위 산업 시설 또는 키예프의 의사 결정 중심지가 될 수 있다.” 오레스니크로 우크라이나의 지도부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동·서 제국주의간 쟁투가 갈수록 더 위험해지고 있다.



서방 정부들은 우크라이나 청년들의 등을 떠민다. 자신들을 위해 싸우다 죽으라고.

트럼프의 특사 지명이 뜻하는 바

11월 28일 트럼프는 군부에서 잔뼈가 굵은 키스 켈로그(80세)를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로 지명했다. 이후 그가 종전 협상을 책임질 것이다.

켈로그는 지난 4월 ‘미국우선주의연구소’에서 종전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공저했다. 거기서 그는 러시아와 대치하는 전선에서 그대로 전쟁을 멈추는 방안을 주장한 바 있다. 동시에 그는 미국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무장 지원 등 안전 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미국 안보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푸틴이 협상을 거부하면 바이든 시절에 무기 제공에 부과한 제약을 해제하고 크림반도와 러시아 내부를 공격할 장거리 무기를 포함해 승리에 필요한 무기를 우크라

이나에 제공할 수 있다.” 이 주장은 지금 바이든이 벌이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

켈로그 지명은 트럼프가 전쟁을 끝내기를 원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선 서방의 전초기지로 남아 있기를 바란다는 점을 보여 준다. 협상이 순탄치 않으면 트럼프 정부는 위협을 부추길 수 있다.

물론 러시아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11월 26일 러시아 대외정보국 국장 세르게이 나리시킨은 전쟁의 주도권이 러시아에 있기에 서방이 분쟁 동결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2월 2일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우크라이나가 재무장할 숨통을 틔우기 위한 서방의 대화 제안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유리한 상황에서 굳이 양보부터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무기 지원을 강행할 수도 있다

11월 27일 우크라이나 특사단을 만난 윤석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여부를 확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주류 언론들은 트럼프 재선으로 윤석열 정부가 무기 지원에 전보다 신중해졌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 같은 우파 언론도 러시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살상 무기 지원에 신중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무기 지원을 강행할 가능성을 계속 경계해야 한다.

미국 지배계급이 여전히 한국의 무기 지원을 바라고 있다. 그리고 11월 28일 유럽 의회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한국의 입장 선회”를 촉구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무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러 간 군사 협력이 계속 진전되고 있어, 윤석열 정부로서는 이를 견제할 필요를 더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런 사정들을 감안해 윤석열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낼 수 있다.

트럼프와 윤석열이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엇박자”라고만 보는 것은 일면적인 관찰이다. 앞서 말했듯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를 서방의 전초기지로 남겨 두기를 바라고, 그래서 향후 우크라이나와 유럽 안보를 위해 한국의 역할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당선 직후 트럼프가 윤석열에게 미국 군함 수리·정비에 대한 한국의 협조를 요청한 데서 확인되듯이, 그도 한미동맹의 성격과 안정성, 미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군국주의를 부추긴 우크라이나 전쟁

전쟁이 3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동·서 제국주의 양쪽에서 군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12월 1일 푸틴은 13조 5000억 루블(약 174조 원) 규모의 국방비가 포함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승인했다. 러시아 국방예산은 올해 대비 25퍼센트 이상 증가했고, 이런 국방비 지출 증대를 위해 사회 보장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서유럽 국가들도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다. 올해 나토 유럽 회원국들의 군비 지출은 전년 대비 18.8퍼센트나 늘었다(국제금융센

터의 10월 보고서).

지난 10월 영국과 독일은 ‘트리니티 하우스 협정’이라는 첫 군사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으로 양국은 장거리 정밀 타격 미사일, 드론 등의 무기를 공동 개발한다. 또한 독일 군수업체 라인메탈이 영국에 새 대표 포신 공장을 세운다. 이 협정을 맺으며 독일 국방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는 군수산업 재편이 “현 시대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군수산업의 기술과 생산력 제고를 위해 애쓰겠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많은 것을 바꿔 놓았다.

북한군은 정말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전투 중인가?

김영익

11월 24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군 참모총장은 북한군 1만 1000명 이상이 러시아 쿠르스크에 배치됐고, 그중 일부가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해 사상자를 냈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언론은 우크라이나군이 20일에 영국제 스톰새도 미사일로 쿠르스크를 공격해 북한군인 500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CNN도 쿠르스크뿐 아니라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하르키우와 마리우폴에서 북한군이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런 보도들만 보면, 북한군 전투병들이 쿠르스크와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충돌을 빚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국내 주류 언론들도 이를 받아쓰기에 바빴다. 그러나 정작 이런 주장들을 뒷받침할 진정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결국 25일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 사브리



쿠르스크의 북한군은 유명인가? 참전 주장은 넘치지만 진정한 증거는 하나도 없다

나 심조차 북한군 사상자나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이동' 모두 "확인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북한군은 "교전할 준비"가 돼 있지만 아직 전투 참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우크라이나 정부

와 한국 국정원 등이 북한군이 쿠르스크 전투에 참여했다고 떠든 것은 대체 무엇인가? 앞서 11월 13일 국정원은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전투에 참여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다 근거 없는 전시 프로파간다였던 것이다.

12월 1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북한군 병사들이 전투 도중 사망하거나 부상했다고 또다시 주장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왜 여태껏 북한군 시신 한 구, 포로 한 명 공개하지 못하고 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

1만 명이 넘는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됐다는 주장이 지난 10월부터 넘쳐났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앞장서서 첩보를 내놓고 윤석열 정부가 바로 정보로 가공해 맞장구를 치는 식이었다. 미국과 나토는 시차를 두고 이를 확인시켜 줬다.

그렇지만 이들이 '전투'의 증거로 내놓은 것 중에 사실로 확인된 것은 없다. 그 사이에 SNS와 주류 언론에서는 온갖 가짜뉴스가 난무했다.

가령 10월 19일 CNN은 우크라이나 정부 기관을 통해 받은 한글 설문지 사본을 보도하며, 러시아군이 북한 군인들의 피복 보급을 위해 만든 문서라고 주장했다. 그 문서에는 "러시아쪽 모자 크기"라고 적혀 있는데, 정작 북한에서는 러시아를 "로씨야"라고 표기한다.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된 "누렁이 개고기"라고 적힌 통조림 영상도 있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개고기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단고기"라고 부른다.

텔레그램 채널들을 통해 쿠르스크에 펼쳐지는 북한 국기 사진도 유포됐는데, <조선일보>(10월 23일 자 6면) 등 국내 언론들이 이 사진을 게재했다. 그러나 이 사진의 진위 여부는 검증되

지 않았다.

10월 31일 많은 국내 언론들이 부상당한 북한 군인이 나온 영상을 크게 보도했다. 이 인물은 얼굴에 붕대를 감싼 채 병상에 누워 "러시아군에 속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11월 8일 <뉴스타파>는 그 영상을 분석한 뒤, "생성형 AI로 조작한 영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영상의 음성 파형을 분석해 보니 소리 편집 작업을 한 것이 의심되고, 화면도 임의로 편집된 듯하다는 것이다.

"다 조작"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북한군 파병에 관해 SNS와 민간 단체가 공개한 정보는 "다 조작"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는 민간 단체는 모두 "우크라이나 정부의 심리전 부대이거나 지원을 받는 곳"이라고 지적했다.<세계일보> 11월 4일 자)

물론 북한이 러시아에 모종의 인력을 파견했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북한과 러시아가 이에 대해 일부터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 북한과 러시아 군사 당국 간 교류와 협력 움직임도 활발하다.

그렇지만 북한이 러시아에 군인들을 실제로 파견했는지 여부, 그리고 그들의 구체적인 규모와 역할에 대해 밝혀진 것은 전혀 없다. 당연히 전투 목적의 파병인지는 더더욱 증거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 정부, 윤석열 정부, 미국과 나토 등도 북한군 파병을 기정사실화해 왔다. 이는 그들 나름의 이해관계 때문이다.

젤렌스키는 북한군 파병설을 유포해 서방과 한국의 무기 지원을 이끌어내고 싶어 한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못마땅해 이를 견제하려고 한다.

바이든 정부는 이 문제를 부풀려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

이처럼 전쟁에서는 거짓말과 진실은폐가 횡행한다. 대중을 속이고 전쟁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서방과 윤석열 정부의 거짓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북한군 파병설을 발미로 한 윤석열 정부의 무기 지원 계획에 반대해야 한다.

북한군 파병(설) 규탄하는 민주당

11월 2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너무 깊이 끼는 것은 바보짓"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무기 지원 계획을 비판했다.

그러나 이런 (서방 제국주의 지원) 문제에서 민주당은 못 미더운 정당이다. 앞서 10월 29일 이재명, 김영배, 정동영, 박지원 등 중랑급 민주당 의원들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냈다.

결의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무기 지원에 반대하고, 한국이 '국제사회'와 공조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만 결국 민주당도 북한군 파병을 기정사실화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끊도록 노력"(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임금 인상, 방학 중 생계 해결, 급식실 인력 충원

12월 6일 학교비정규직 파업 지지하라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12월 6일 하루 파업에 나선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방학 중 생계 대책 마련, 급식실 인력 충원·처우 개선 등을 요구한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십수 년 전 노조를 조직하고 투쟁에 나서 처우를 개선해 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비정규직으로서 차별과 멸시를 받으며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수년간 물가 폭등으로 실질임금이 감소했다. 2021~2023년 임금 인상률은 일명 ‘장바구니 물가’인 생활물가상승률을 크게 하회했다.

2022년 이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은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근속수당과 상여금, 식비 등을 포함해야 겨우 최저임금을 넘는 다. 정규직 대비 절반도 안 되는 근속수당은 지난 2년간 동결됐다.

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정규직과 차별 없이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조차 계속 무시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에게엔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오래 일할수록 정규직과의



물가 폭등으로 저하된 생활수준 회복에 나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진다. 10년차 기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은 정규직의 69.2퍼센트에 불과하다.

방학 중에는 근무하지 않는 노동자들이 많은데 이들에게는 일부 수당 외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오죽하면 방학은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학교비정규직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는 급식실과 돌봄교실 지원 대책도 거의 없다.

지금도 급식실은 방학 중 무임금과 저임금, 고강도 노동, 폐암 산재 위험으로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그런데도 사용자 측은 조리종사자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 대책엔 묵묵부답이다.

또한 교육청들은 올해 배정된 급식

실 환기시설 개선 예산 집행률이 떨어진다며 내년 예산을 32퍼센트(1280억 원)나 삭감했다. 여러가지 이유로 지연됐을 뿐 환기시설 개선이 필요한 곳은 여전히 많은데 말이다. 전형적인 관료 주의적 대응이다.

늘어나는 돌봄교실을 맡고 있는 노동자들의 업무 과중도 상당하다. 그러나 교육부는 필요한 투자는 충분히 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아동 관리·민원 대응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차별과 멸시

정부와 시·도 교육청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며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진보교육감들도 보수교육감 뒤에 숨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철도, 서울지하철 노동자들과 같은 시기에) 파업을 예고하자,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는 “경제와 일상 생활을 볼모로 한 투쟁”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일부 보수 언론들도 “급식실·돌봄교실도 파행 위기” 운운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체 교직원의 41퍼센트나 차지한다. 이들은 교육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구성원이다. 그만큼 중요하고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대표자들은 12월 2일 교육부 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교육부 로비에서 연좌농성을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폭력적인 강제 해산과 연행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지지율 폭락에도 불구하고 경제 위기와 물가 인상의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공격을 멈추지 않으려 한다.

임금 인상과 생계 대책을 요구하는 학교비정규직 투쟁은 완전 정당하다.

신정환

화물연대 파업

안전운임제 확대 재도입을 요구하다

12월 2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확대 간부(전임·비전임 간부) 2500여 명이 하루 파업을 하고 국회 앞에 모였다.

노동자들은 2022년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화물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일종의 최저임금 제도)를 재입법하고 적용 범위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예상보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고 참가했다.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화물 노동자들의 생계 위기가 더욱 악화됐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운송 단가가 삭감된 데다 일감도 부쩍 줄어 더욱 힘들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절박함과 간절함이 곳곳에서 묻어나는 현장 발언들이 많았다.

20년 넘게 시멘트를 운송해 온 충북 지역본부 BCT지부 이성철 조합원은 이렇게 말했다.

“안전운임제 시행 전 차에서 쪽잠을 자면서 일했습니다. 화주들의 과적 강요는 일상이었고, 실제로 적자를 내지 않으려면 수 톤씩 과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분진이 날리는 환경에서 과적까지 더해지며 차량은 채 5~6년이 안 돼 폭삭 주저 앉았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밀리는 아찔한 경험은 일상이었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은 다시 이런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순순히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운임제 도입은 화물 노동자들의 과적·과속 부담을 줄여 도로 위 안전

도 강화한다.

일반 화물을 운송하는 전남지역본부 여수지부 박준일 조합원은 안전운임 적용 차종과 품목이 일몰 전보다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가 함께 발의한 안전운임제 [재도입] 확대 법안에는 1톤, 5톤, 12톤, 25톤 카고차에 대한 운임 고시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대로 되면 하루 13~15시간씩 미친 듯이 일해야 했던 화물 노동자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화물 노동자들의 생계 위기에 눈곱만큼도 관심 없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대한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가 컸다. 정기국회 종료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교통소위에조차 안전운임제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국회는 일해라! 안전운임제 확대하라!”고 외쳤다.

집회를 마친 화물 노동자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당사앞으로 행진해 갔다.

행진 내내 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 일몰시킨 윤석열을 퇴진시키자,” “국민 안전 일몰시킨 국민의힘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은 화물연대 지도부와의 면담에는 응했지만, 안전운임 확대 적용 재입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오동 대구지역본부 동부지부장은 “잠자는 국회를 깨워야 합니다. 화물연대가 다시 한번 총파업을 준비해서라도 정신이 번쩍 들도록 해야 합니다” 하고 말했다.

안우춘



“윤석열하에서 학업이 아니라 생계가 최우선이 돼 버렸다”

교수·연구자들에 이어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윤석열 퇴진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5주 연속 서울 도심에서 10만 명 안팎의 대규모 반윤석열 시위가 열리는 가운데, 대학가에서도 반윤석열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한 달 동안 4300명이 넘는 대학 교수·연구자들이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에 나섰고, 대학생들도 시국선언 물결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10월 21일 경남윤석열퇴진대학생행동, 윤석열퇴진경남지역대학생시국모임은 국립창원대 정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경남지역 대학생 1000인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은 3년의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남은 3년은 더 두고 본다 해도 청년들의 목만 쥔 뿐이다.”

11월 14일에는 전남대 학생들이 모인 시국선언 추진위원회가 전남대 인문대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퇴진을 요구했다.

한 전남대 사학과 학생은 <경향신문>에 시국선언 취지를 이렇게 밝혔다. “[전남대에서] 107명의 교수님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는데 학생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선언을 준비하게 됐

다.”

11월 26일 성신여대 정문 앞에서는 성신여대 재학생·동문 51명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기만 하면 ‘반국가세력’이라 낙인찍고 압수수색 등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부경대에서는 윤석열 퇴진의 목소리를 낸 대학생들을 학교 본부는 감금하였고 경찰 병력 200명이 투입돼 폭력적으로 학생들을 연행했습니다.

“정권을 비호하고 있는 국정원, 검찰, 경찰청 등에 대한 예산은 늘리지만, 막상 디지털 성범죄 예산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범죄에 대한 예산은 줄이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11월 29일 전주대학교 신정문 앞에서는 전북 지역 대학생들로 구성된 전북윤석열퇴진대학생행동이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윤석열 퇴진을 요구했다.

그 자리에서 전주대학교 1학년 고정민 씨는 “채 상병의 순직에도 모른 척하는 정부인데 내 친구들이 다치거나 안 좋은 일을 당해도 그 책임을 누구도 안 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청년들의 삶을 나 몰라라 하는 정부를 끌어내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12월 2일에는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서 고려대 학생 270명이(12월 2일 오후 12시 기준) 연명한 시국선언이 발표됐다.

“거리 한복판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그곳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러 떠난 우리의 친구가 목숨을 잃었으나 국가는 이를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본 책무조차 다하지 못하는 정부에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고려대학교 학생 265인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합니다.”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주최한 학생들은 연명에 동참하는 학생이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생들의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은 더 확산될 듯하다. 12월 5일 숙명여대, 12월 6일 한국외대에서도 대학생 시국선언이 발표될 예정이다.

시국선언 외에도 전국 대학가에서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대자보들이 게시되고 학내 홍보전이 벌어지고 있다. 위기에 빠져 있지만 결코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윤석열에 맞서, 이런 행동들이 많아져야 한다.

이재혁

사제 1466인 시국선언 대주교와 주교 같은 고위 사제들도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다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대학가를 비롯해 각계로 확산되고 있다.

11월 28일에는 천주교 사제 1466명이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민심의 아우성을 차마 외면할 수 없어” 시국선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사제들은 윤석열을 ‘거짓의 사람, 어둠의 사람, 폭력의 사람, 분열의 사람’으로 규정했고, “그러잖아도 배부른 극소수만 살찌게, 그 외는 모조리 나락에 빠뜨리는” 윤석열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명을 모조리 저버린 책임을 물어 파면을 선고하자”고 강조했다.

가톨릭 사제들의 이번 시국선언이 특히 큰 파장을 낳는 까닭은, 전국 각지에서 현역 사제의 3분의 1가량이나 참가했을 뿐 아니라, 광주대교구장 옥현진 대주교를 비롯해 전주교구장 김선태 주교, 청주교구장 김종강 주교, 춘천교구장 김주영 주교, 제주교구장 문창우 주교 같은 고위 사제들도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사제들이 특정 지역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걸쳐 있다”며 “종교계가 움직이는 상황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사제들은 “[대통령을] 뽑아버릴 권한도 함께 지닌 주권자이니 늦기 전에 결단하자”고 촉구했다. 윤석열에 대한 광범한 반감을 퇴진 행동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더 커져야 한다.

강동훈



사제들의 이번 파면

이토록 인기 없는 자가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게 과연 민주주의인가

김인식

윤석열 반대 운동이 커지고 있다. 시국 선언에 참여한 대학 교수·연구자는 4300명(70여 개 대학)을 넘겼다. 천주교 사제 1467명이 시국선언을 했다. 대주교와 4교구의 주교 등 고위 성직자들도 이름을 올렸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총궐기를 두 차례 개최했다. 12월 7일에는 3차 총궐기가 예정돼 있다. 서울 광화문 거리에서는 11월부터 주말마다 10만 명이 넘게 참가하는 반윤석열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반대 여론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중도 하차’ 찬성 여론은 ‘임기 완수’ 여론의 두 배 가까이 된다. 응답자의 60~70퍼센트가 탄핵, 자진 하야,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 등을 지지한다.

일부 언론들은 대통령 지지율이 10퍼센트대면 “통치 불능” 상태라고 썼다. “뭘 해도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정부의 정책이 실현될 수가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실로 윤석열은 광범한 사람들에게서 불신을 사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은 임기를 채우겠다고 공언했다. 또, 대중에게 인기 없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내놓고 말한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임금 억제, 구조조정, 의료 시장화, 친미·친일 대외 정책, 각종 친기업 정책 등.

이런 상황은 매우 중요한 점을 보여 준다. 자본주의 국가기구(행정부는 국가기구의 일상적 집행부다)가 결코 민주적이지 않음을 보여 준다. 민주주의는 다수가 결정하는 통치 시스템, 즉 대중에 의한 지배다.

헌법 제1조 2항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선거 때 아주 짧게 그런 대접을 받는 듯하지만, 평소에는 권력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돼 있다.

그래서 헌법 제1조 1항에 명시돼 있는 “민주공화국”은 민주주의를 온전히 구현하지 못한다.

“민주공화국”의 실체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다. 그런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별 관계가 없거나, 있어도 매우 제한적이다.

러시아 혁명가 레닌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거짓, 허위,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부자들을 위한 민주주의”일 뿐이고 “압도 다수의 노동자들은 민주주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자본가 계급의 독재”다.



반윤석열 집회 모습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비상시가 아닌 평상시에 자본가 계급(이들이 권력자들과 함께 지배계급을 이룬다)의 이익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국가 형태다.

그렇다고 해서 자본가 계급이 다른 국가 형태(군부 권위주의나 파시즘) 하에서는 번성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보다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다른 국가 형태에는 없는 이점을 자본가들에게 제공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최대 장점은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대립하는 두 주요 계급과 국가의 관계를 조직하는 방식에 있다.

자본가와 노동자가 본질적으로 불평등한데도 자본주의 국가는 이들을 각각 한 표를 행사하는 원자화되고 평등한 ‘시민’으로 보이게 하는 정치 영역을 창출한다.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의 핵심 목표는 자본가의 생산수단 지배와 이윤 창출을 수호하는 것이지만,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통해 외관상 투쟁하는 양대 계급으로부터 국가가 자율적인 존재로 보이게 한다.

가령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으로 구성된다. 형식적으로는 노-사-정이 동등한 비율로 공정하게 구성된 듯 모양새를 갖춘다. 그러나 노사 입장 차이가 첨예할 때 정부측 위원은 언제나 사용자위

원의 입장에 유리한 결정을 내린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지배계급에 두 가지 이점을 제공한다.

첫째, 4~5년에 한 번씩 국가의 공직들을 선출하는 과정을 통해 국가가 “중립적”이라는 환상을 퍼뜨리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환상

또, 국가 정당성 확보의 다른 일환으로 노동계급 조직들(노동조합과 정당 등)에 상당수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의 동의를 끌어낼 조건을 마련한다.(물론 오늘날 자본주의 시스템이 심각한 위기를 겪으면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도 강제력 사용이 늘고 있다. 지난봄 바이든 정부는 경찰을 투입해 대학생들의 팔레스타인 연대 점거 농성을 진압했다.)

동의에 의한 지배는 지배계급과 개혁주의 조직들이 모두 간접히 원하는 “정상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소위 “정상 상태”는 지배계급의 통치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상태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지배계급에 주는 두 번째 이점을 살펴보자. 상이한 자본가 계급 부분들은 각자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가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 정당을 조직하거나 후원하고, 매스 미디어를 운영하며,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하는 식으로 말이다.

자본가 계급은 노동계급 착취 문제

공개 토론회

관심 있는 주제, 가까운 지역을 찾아보세요

더 많은 공개 토론회
상세 정보



서울

윤석열 퇴진 운동과 노동자 투쟁

일시: 12월 5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서울 교원투어빌딩 지하4층 강연장 (종각역 5번 출구 도보 5분)

발제: 김문성 (노동자 연대) 기자, 《문재인 정부, 촛불 여민을 저버리다》 공저자

참가비 5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지역 모임들

문의 010-8074-2793 / s-west@ws.or.kr

서울

우크라이나 전쟁과 휘말리는 남북한?

일시: 12월 11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서울 교원투어빌딩 지하4층 강연장 (종각역 5번 출구 도보 5분)

발제: 김영익 (노동자 연대)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 -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각축전》 공저자

참가비 5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지역 모임들

문의 010-4909-2026 / wsorg@ws.or.kr



5주 연속 주말마다 10만 명이 넘는 규모로 이어진 반윤석열 집회

진정한 민주주의의 초축소판

를 놓고는 단결한다. 그들의 공통된 목표는 노동자에게서 더 많은 잉여가치를 뽑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잉여가치 분배를 둘러싸고 경쟁하는 다수 자본들로 존재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분열해 있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이런 상이한 이해관계에 상대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지배계급의 통치를 위태롭게 하지 않고 보증하겠다고 맹세한 이러저러한 (친)자본주의 정당들이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한국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돌아가며 집권 세력이 된다.

유럽 나라들에서는 사회민주주의 정당도 합법적 집권을 위해 함께 다투는 주요 세력이다. 노동조합 관료층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노동계급의 불만을 일정 정도 대변하면서도 노동계급을 설득·억제해서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한다.

그런데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지배계급의 통치를 보장하지 못하거나 위태롭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가?

지배계급은 자신의 통치권이 위협받는다라고 여기면 스스로 정

한 민주주의 물을 강그리 무시했다. 1973년 칠레에서 살바도르 아옌데 정부를 전복한 피노체트 쿠데타는 널리 알려진 한 사례일 뿐이다.

권위주의

군부 쿠데타가 성공하면 지배계급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헌법적 장식 없이 강압 통치를 할 수 있다. 노동계급 조직들이 금지되고 표현(집회, 시위 등)의 자유가 심각하게 억압되고 반정부 인사들(심지어 공공연한 자본주의의 정당 소속일지라도)이 체포되고 수감된다.

그러나 군부 독재는 지배계급 통치 보장에 대한 지속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지배계급이 특정 조건에서 쿠데타를 유일한 안정화 대책으로 여겨 지지할 수 있지만, 장차 노동자들뿐 아니라 일부 자본가들도 군부 독재를 꼭 끼는 코르셋으로 여기게 되면 그 구조에 균열이 생기기 때문이다. 1980년대 중후반에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군부 쿠데타는 그 결과가 자칫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지배자들에게는 덜 매력적인 시나리오다. (얼마 전 제기된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모의 의혹은 국가 형태를 권위

주의로 되돌리려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그런 시도가 성공할 수 있는 계급 세력 균형도 아니다. 아마도 윤석열 정부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속에서 유사시 군부에 의한 친위 쿠데타를 고려 사항에 포함시킨 듯하다.)

서구에서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응해 기층에서 파시즘이 성장하는 한편, 기성 보수 정당이 극우적으로 변하고 있다. 트럼프가 이끄는 공화당은 극우 정당으로 급진화하고 있다. 또, 이탈리아에서는 파시스트가 총리이고, 프랑스에서는 마린 르펜이 이끄는 파시스트 정당 국민연합이 집권을 넘보고 있다.

파시즘은 군부 권위주의의 정치 체제와 유사한 점들이 있지만 둘은 같은 게 아니다. 파시즘은 특별한 극우다. 파시즘 국가(이탈리아에서 파시스트가 총리가 됐지만 아직 파시즘 국가가 수립된 것은 아니다) 모든 민주적 권리를 폐지하고 노동계급의 모든 조직을 완전히 해체한다. 심지어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범죄인 홀로코스트조차 자행했다.(파시즘을 더 자세히 알려면 최일봉이 본지 514호에 쓴 '민중전선 — 파시즘에 맞서려면 반드시 필요한 연합인가?'를 보시오.)

민주적 권리를 위한 투쟁은 중요하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본질이 “자본가 계급의 독재”이기 때문에 지극히 제한적이고 대중을 정치로부터 소외시킨다.

지배계급은 의회 제도를 내세워 대중이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듯한 환상을 만들어 내고자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의회라는 작은 섬에 갇혀서는 결코 만개할 수 없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와 자본가들이 대양(산업, 금융, 군대, 경찰, 검찰, 법원, 언론 등)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대중의 실생활에 훨씬 더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의회에 한정된 민주주의와 권력자·자본가의 무한한 비민주적 권력은 도저히 경쟁이 될 수 없다. 후자가 승리해 왔다.

대선(2017년)과 총선(2022년)에서 모두 승리한 바 있는, 당시 슈퍼 여당 민주당 정부는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신자유주의 정책들과 노동개혁을 추진했다.

이재명이 당선되면 다를까? 대선 후보 이재명의 행보는 대통령 이재명을 예시한다. 윤석열 정부의 위기가 심화되자 이재명은 거리 시위에 나서면서도 동시에 우클릭도 활성화하고 있다(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찬성).

그래서 진보당이 민주당과 전략적 제휴를 맺는 전략(민중전선)은 진보당의 사회 대개혁 목표를 실현시켜 주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이 아닌 좌파 정당이 집권하면 다르지 않을까? 대답은 아니오이다. 그리스의 좌파적 개혁주의 정당 시리자는 반긴축 강령을 내세워 2015년 1월 총선에서 이겼지만, 6개월도 안 돼 은행가들과 자본주의 국제 기구에 굴복했다.

역사적·국제적 경험을 보면, 의회의 힘에 의존하게 될 때 노동자들은 자신감을 잃게 되고 방어 수단은 약화됐다. 의회 중심주의의 핵심은 평범한 사람들이 자력 해방을 이룰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하에서 민주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할 가치가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언론·출판의 자유 덕분에 <노동자 연대>도 발행될 수 있다. 잡담 장소일 뿐인 의회도 주관적·객관적 조건이 충족되면 혁명가들이 반자본주의 사상을 선전하는 연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파시스트나 군부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나 특정 민주적 권리를 파괴하려 든다면 이를 수수방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파괴되면 노동계급의 조직도 파괴되고 민주적 권리가 침해되면 사회주의자들의 활동도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때조차 혁명가들은 의회 민주주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재작동 자체가 혁명가들의 목표는 아니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자본가 계급이 좀 더 안정적으로 착취할 가능성을 열어 줄 뿐, 노동계급의 해방을 열어 주지는 않는다.

민주주의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삶을 옥죄는 자본주의적 경제·정치 권력을 우리 손으로 패퇴시키기 위해 부단히 투쟁하는 것밖에 없다.

정우성·문가비 씨의 비혼 출산을 옹호한다

혼인, 출산, 가족 구성은 당사자가 선택할 문제다

성지현

배우 정우성 씨가 모델 문가비 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게 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우성 씨는 문가비 씨가 출산한 아들이 자신의 친자이고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지만 문가비 씨와 결혼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이후 언론들의 선정적 보도가 쏟아졌다.

정우성 씨의 각종 사생활, 십수 년 전의 인터뷰 발언, 한 역술인이 본 정우성 씨의 관상, 그의 재산과 그에 따른 양육비 추정 금액, 재산 상속 문제 등. 이런 보도가 불쏘시개가 돼 각종 논란을 키웠다.

영국 공영 방송(BBC)는 “한국 스타의 혼외자 스캔들이 국가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우성 씨는 청룡영화제에서 시상식 무대에 올라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염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모든 질책은제가 받고, 또 안고하겠습니다.”

정우성 씨가 박근혜 퇴진을 지지하고 난민 인권을 옹호하는 등 진보적 행보를 해 온 점 때문에 우파에게 표적이 된 듯하다.

특히 기독교 우파가 정우성 씨의 혼외 출산을 비난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는 “아이를 물질로써 책임만 지면 된다는 비뚤어진 의식을 버리도록 해야” 한다고 훈계했다.



오늘날 가족 형태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도 나경원 의원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놓은 등록동거혼을 반대하며 이렇게 말했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양육환경은 한 명의 아버지와 한 명의 어머니로 구성된 건강한 가정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심한 편견일 뿐이다. 오늘날 가족 현실에 비춰 보면 편협하기가 그지없다.

혼인으로 맺어진 남녀와 그 자녀로 이뤄진 핵가족이 이제는 더는 지배적인 가족 형태가 아니다. 비혼 또는 이혼한 부모 가정, 사실혼 관계, 동성 커플 등 가족 형태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결혼과 출산이 분리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비혼 출산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4.7퍼센트). 유럽(50퍼센트 이상)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늘고 있다.

인식도 바뀌고 있다. ‘2024 사회조사’(통계청)에 따르면 20대의 43퍼센트가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10년 전에 비해 12.5퍼센트포인트나 늘었다.

그래서 정우성·문가비의 비혼 출산에 긍정적인 여론도 적지 않다.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의 최형숙 대표는 정우성·문가비 씨 관련 기사의 댓글을 보며 20년 전과 비교해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의 분위기와 시선이 상당히 바뀌었음을 느낀다고 했다.(MBC<김종배의 시선집중>)

또, 이참에 비혼 출산과 한부모 가정

에 대한 열악한 제도와 지원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런데 일부 페미니스트는 정우성 씨를 비난한다.

예컨대 《직업을 때려치운 여자들》의 공저자인 이슬기 씨는 <여성신문>의 칼럼에서 정우성 씨에 대한 ‘못 여성들의 비판’을 이렇게 옹호한다. “결혼이라는 ‘제도’로라도 돈으로만 귀결되지 않는 양육의 부담을 남자에게 강제하고 싶기 때문”이고 “남성의 무책임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여자들이 짊어져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의 무게에 대한 집단적 분노의 표현이다.”

안타깝게도 이런 견해는 보수적 관념에 타협하는 것이다.

이런 견해는 결국 개별 가족에 떠넘겨진 양육 부담을 문제 삼기는커녕 인정한다. (비록 그 책임을 여성에게서 남성으로 지우자고 하지만 말이다.) 그리고 여성 자신의 선택 가능성을 지운다. 출산과 양육을 문가비 씨 자신이 선택한 것이다.

이처럼 성의 다양한 관계를 ‘가해자와 피해자’로 환원하면 의도치 않더라도 도덕주의와 성 보수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제삼자가 모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두 성인 남녀가 합의해 한 생명이 태어났다니 축하할 일이고, 부모가 책임을 다한다니 아이에게 좋은 일이다. 그 선택을 존중하면 될 일이다.

비혼 출산과 한부모 가족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정우성·문가비 씨의 혼외 출산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관련 제도 논의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은 등록동거혼 도입을,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연대관계등록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현재 “혼인·혈연·입양”만으로 이뤄진 협소한 법적 가족 규정을 현실을 반영해 좀 더 포용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니 일단 지지할 수 있을 듯하다. 얼마나 실질적으로 추진하려고 할지는 의문이지만 말이다.

국힘의 의원조차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지금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지배자들이 매우 우려하기 때문일 것이

다.

하지만 법적인 가족 범위를 약간 늘리는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엇보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실질적이고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최형숙 미혼모협회 ‘인트리’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이번 일을 계기로 긍정적으로 변했으면 한다.” “양육비 지급이 필수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대부분의 한부모 가정은 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다. 출산 직후 여성들은 대부분 경력이 단절되고, 이후에도 양육과 병행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비혼 출산 지원 관련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부모의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다.”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가장 기본적인 돌봄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도 법적 가족이 아니면 그 대상이 안 된다. 복지제도가 대개 법적 가족을 기초 단위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협소한 가족 규정을 고수하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매우 제한된 변화마저도 거부했었다.

현재, 정부의 양육 지원은 그 필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부모급여가 있

지만 자녀가 0~1세일 경우로 한정된다(0세일 경우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 이 시기에는 양육자가 아기에게 상시 붙어 있어야 한다.

자녀가 만 18세 미만일 경우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는 고작 21만 원에 불과하다. 그것도 저소득층을 선별해서 준다. 대체 이 돈으로, 더구나 저소득층인 양육자가 애를 어떻게 키운다는 말인가?

미혼모·한부모의 조건을 개선하려면 지원을 대폭 늘려 국가가 양육과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고,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거의 질도 개선해야 한다.

우리의 기본 입장 해설 24

여성 해방은 성평등 그 이상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하는 것이야 말할 나위도 없고, 기본적인 성평등을 누리기 까지도 갈 길이 먼 처지다.

여성이 공식적으로는 남성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여성들의 투쟁 덕에 법규정이 바뀌고 사회 규범이 변했다.

사회주의자들은 여성의 요구가 더 나은 세상을 쟁취하기 위한 광범한 투쟁의 일부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여성이 어려움 없이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것, 학대를 멈추는 것, 성별 동일임금 등이 중요한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변화를 쟁취하는 것은 성차별에 맞선 투쟁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그러나 체계적 불평등은 아직 버젓이 온존한다.

성별 임금 격차는 이를 계량하기에 가장 용이한 사례의 하나일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여성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과 투쟁으로 기업주와 정부는 동일 임금 요구를 의식해야 했다.

198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이렇게 규정했다.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런 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여성은 남성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다.

기업주들은 돌봄·접대·서비스 등 여성이 하는 일의 가치를 폄하함으로써 법을 피해 가곤 한다. 여성은 그런 일들을 하도록 사회화되고, 그런 일에 종사함으로써 노동자로서의 가치를 폄하당한다.

여성은 자녀 출산·양육으로 경력이 단절되거나,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자녀 양육 때문에 노동 시간이 줄거나, 비정규직 일자리를 얻거나, 아예 일자리를 포기하게 되면서 남성보다 임금이



법 규정은 바뀌었지만 체계적인 여성 차별은 버젓이 온존한다

적어지기도 한다.

이것은 세계적 현상이지만, 한국은 유독 심하다.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31.2퍼센트 임금을 덜 받는다(2021년 기준). 이 수치는 OECD 회원국의 성별 임금 격차 평균의 3배가량 된다. 한국 여성은 3시 이후부터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영국은 2010년 평등법을 개정해 대기업이 성별 임금 격차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로써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는 지난 50년 동안 영국의 동일임금법이 이런 성취가 얼마나 적은지를 드러낼 뿐이다.

한국은 기업주들의 반발로 성별 임금공시제도 시행조차 못 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2019년 153개국의 실태를 분석한 뒤 남녀 경제 격차를 해소하려면 257년이 걸린다고 밝혔다.

임신중지권

임신중지권 같은 쟁점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서구에서는 1960~1970년대 대중운동이 벌어져 노동계급 여성이 원한다면 언제든 합법적으로 임신중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영국에서는 1967년에 임신중지법이 제정돼, 여성이 재생산 문제에 관해 의료 서비스를 누릴 얼마간의 권리를 보장했다.

그러나 영국에서도 여성은 여전히 임신중지 접근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그런 권리가 있을 때에도 임신중지가 범죄시되는 일이 점차 늘고 있다.

이는 여성의 권리가 법조문에 명시돼 있다 해도 진정한 평등을 누리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한 사례일 따름이다.

미국에는 반세기 만에 임신중단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됐다. 그리고 몇몇 주에서는 임신중지 시술자나 시술을 받은 여성을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법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한 이후 아직까지도 대체임법이 되지 않아 여성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정부

는(민주당 정부든, 우파 정부든) 임신중지 반대 세력 눈치를 보며 임신중지권을 방치해 왔다.

그러나 여성 해방을 위한 투쟁은 한 다발의 단일 쟁점 운동들로 환원될 수 없다. 그 쟁점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든 간에 말이다.

이는 사회의 실질적 변화는 평범한 사람들의 투쟁으로 쟁취할 수 있고, 또 제도적 평등이란 보기보다 한계가 훨씬 많다는 것을 보여 준다.

여성 억압은 자본주의 체제하의 더 광범한 착취·억압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자유주의 정치 논리는, 자본주의하의 평등이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당신이 여성이든 아니든 우리 모두를 억압하는 체제다.

진정한 해방은 총체적 사회 변혁의 맥락 속에서만 가능하다. 다음 연재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쟁취할 수 있을지 다룬다.

이 글은 본지의 기본 입장을 해설하는 기획 연재의 스물네 번째 글이다(QR코드로 전체 연재 보기).



▶ 16면에서 이어짐

는가, 우리는 기억한다.” “막을 수 있었다. 학교는 없었다” 하고 외쳤다.

동덕여대 시위를 둘러싸고 우파 정치인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언론 등은 “폭력 사태,” “젠더 갈등” 운운한다. 그러나 사태의 진정한 핵심은 그동안 학교가 학생들을 무시하고 천대해 온 것이고, 또 형편없는 재정으로 인해 학생들이 열악한 교육 여건 속에 고통받아 온 것이다.

반면, 동덕여대 재단(동덕학원)은 각종 비리와 횡령으로 자신의 배를 불러온 혐의가 있다.

현재 이사장 조원영은 학교 설립자인 조동식의 손자로, 총장 재직 시절 등록금 70억 원을 횡령한 의혹이 불거져 사퇴했다가 복귀한 인물이다. 그때도 역시 학생들의 조원영 복귀 반대 의사는 무시됐다.(대학 설립자 조동식은 친

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 포함된 자다. 학생들이 래커로 쓴 구호 중 ‘친일 청산’이 있는 이유다.)

최근 여성의당은 동덕여대 이사회 회의비가 건당 600만 원 이상으로 책정된 점, 이사장의 아들과 딸이 모두 동덕학원 법인과 그 법인이 운영하는 동덕 아트갤러리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며 지난해 연봉이 무려 40퍼센트나 인

상된 점, 학교 재산인 서초 방배동 아파트를 무상 사용한 점 등을 의혹으로 제기했다.

때마침 67개 여성 단체들은 11월 27일 비민주적 학교 당국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동덕여대 당국은 형사 고소 철회하고 가처분 신청도 철회하라.

성지현



동덕여대 학생 투쟁 정당하다!

동덕여대 당국이 11월 29일 점거 학생 19명을 특정해 6개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경찰은 12월 2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 당국은 같은 날, 점거 참가 학생들의 퇴거와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도 했다.

이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강제 해산을 위해 경찰력을 투입하거나 학생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12월 2일 학교 당국은 입장문을 내어 “이번 사태로 인하여 시위에 참석하지 않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혹한 사회적 편견과 불이익을 감당해야 한다”며 “주동 학생들에게 그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학생들을 이간하고 있다.

우파 언론들이 농성 학생들을 연일 비난하고 집권당 대표인 한동훈까지 나서서 학교를 편들자 학교 당국이 자신감을 얻어 더욱 강경하게 나오는 듯하다.

보수주의자들은 반정부 대학생 정서가 대규모 행동으로 비화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학생들의 투쟁을 다수의 반대를 거스른 소수의 독단적 소행으로 보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남녀공학 전환 반대 요구와 총장 직선제 요구는 20일 학생들의 최고 의결기구인 학생총회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총회에는 정족수(재학생의 1/10)의 세 곱절이 넘는 학생이 참가했다. 당시 총학생회가 점거 중이었음을 고려하면 총학생회가 소집한 총회의 성사와 압도적 지지는 많은 학생들이 해당 요구와 투쟁 방법(점거 농성)을 지지한다는 뜻이다.

무시와 천대

학교 당국은 학생총회를 “정상적 절차로 보기 어렵다”며 부정한다. 학생들의 최고 의결기구조차 맘대로 무시하는 것은 그동안 학교가 학생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를 드러낼 뿐이다.

동덕여대 투쟁이 대중적이고 전투적으로 벌어진 것은 그동안의 불만과 분노가 누적됐기 때문이다.

남녀공학 전환은 학생(과 졸업생)에



김종조 기자

보수주의자들은 반정부 대학생 정서가 대규모 행동으로 비화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게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일 것이다. 그동안 번번이 학생들을 무시하고 교육여건 개선 요구를 외면해 온 학교 당국이 이런 정책으로 등록금만 더 챙기려 하는 것에 학생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학교 당국은 이렇게 말했다. “무엇을 사과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학 발전을 위한 논의는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토론도 못 하게 만드는, 아집과 독선으로 뿔뿔 뭉친 비민주적 집단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7년, 2022년, 올해 초에도 학교 당국은 학사제도 개편안을 학생 동의 없이 밀어붙인 바 있다.

올해 3월에 진행된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생 위원들은 수업의 질을 악화시킬 게 뻔한 학사제도 개편(무전공 모집, 상경계열 전공 통폐합 및 신설)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소용없었다. 나머지 위원 8명이 찬성했기 때문이다. 애초 기울어진 운동장인 셈이다. 그 전까지 학생들은 설문조사, 반대 서명, 비상 집회 개최 등을 했었다.

학생들이 교무회의가 열리기 전에 점거에 나선 것은 과거 투쟁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2016년 84일간의 본관 점거로 요구

를 쟁취한 이화여대 학생들이 보여줬듯이, 점거는 전통적으로 학생 운동이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투쟁 전술이다.

한 동덕여대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학교에 요구한 것들이 많은데 들어주지 않았다. 본관 앞 운동장도 바닥이 균열돼 무너질 것 같으니 고쳐 달라고 요구한 지도 꽤 됐고, 교원 확충 요구도 안 들어줬다. 돈이 있는데도 우리에게

쓰지 않았다. 지금 공학화가 제일 크게 두드러진 것뿐이지 이전부터 학생들은 계속 요구해 왔다.”(기자가 취지를 살려 윤문함)

특히, 지난해 안전 설비 미비로 동기이자 선후배인 한 학생이 캠퍼스에서 참변을 당한 일은 학생들 마음에 깊이 각인됐을 법하다. 올해 1주기 추모 집회에 모인 학생 200명은 “학교는 잊었

▶ 15면으로 이어짐

초대합니다!

노동자연대

2024년 연대의 밤

① 2024년 12월 6일(금) 저녁 6시~11시

② 서울 을지로 태성골뱅이신사 본점 3층
(서울 중구 을지로3길 35, 을지로입구역 1번 출구)

◆ 후원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백은진)

노동자연대 ws.or.kr | 02-2271-2395 | wsorg@ws.or.kr